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월드컵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SBS의 월드컵 독점중계에 따른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SBS는 지난 2006년 8월 IOC와 FIFA로부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올림픽과 2개의 월드컵 중계권료를 각각 7250만 달러, 1억40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고가에 사들였다. KBS와 MBC의 제소에서 보듯이 그 파장이 작지 않다. 먼저, 법리적인 문제부터 살펴보면, 보편적 시청권이 제기될 수 있다.

는 것에 대해 SBS가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과거처럼 지상파 3사가 동시 중계할 이유는 없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은 차치하

있다. 일본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NHK와 5개 민영방송이 가입한 '재팬 컨소시엄'이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중계권 협상에서 창구 역할을 한다. 월드컵과 올림픽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NHK가 협상을 주도하고 중계방송도 중복되지 않도록 NHK가 조정한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가 중계권료의 50~60%를 내고 주도권을 쥐며, 경기별로 방송사들이 추천을 해 중복 방송을 피한다.

취하는 방식이 그나마 적합한 모델이다. 공영방송의 주도 아래 방송 3사가 나누어서 중계하는 것이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다.

SBS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동계올림픽을 재전송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해 논란이 있었는데,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재전송 대가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이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 개념과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케이블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갈등으로 올림픽, 월드컵의 재전송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SBS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고가를 들여 확보한 SBS는 이미 스포츠중계권에 관한 한 기록적이다. 지상파 3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교차중계는 필요하다. 미래 스포츠시장을 예견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3사가 'Korean Pool'을 형성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뿐이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 단독중계나 교차중계나

고 지구상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지상파 여러 채널이 동시에 중계하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밴쿠버동계올림픽을 SBS가 단독 중계했음에도, 방송중계시간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긴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국민적 관심사가 큰 스포츠이벤트이긴 하지만 '우민국가'도 아니고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KBS, MBC, SBS가 모두 월드컵을 동시 중계하는 것은 전파남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월드컵과 관련하여 SBS만의 단독중계는 미증유의 후유증을 남길 수

구를 만든다. 또한, IOC가 보편적 접근권을 내세워 올림픽 경기의 95% 이상을 무료로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상파와 협조 없이 케이블방송이 높은 값을 주고 중계권을 사들일 수도 없다.

다만 월드컵 중계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등은 미국처럼 방송사들이 따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보편적 접근권을 법으로 보장해 유료 채널이 독점 중계권을 따더라도, 주요 경기는 지상파로도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올림픽과 월드컵중계권을 두고 각 방송사들이 철저히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

시설

교육비리 수사 장기화 부작용 최소화해야

광주·전남교육계에 대한 사정이 장기간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지역 교육계 비리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 부터다.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서부교육청과 학교 등 50여개 교육기관의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내역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 자료가 검·경에 제출됐으며 일부 교육청 직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전남지역 역시 도와 시·군 교육청의 물품구입과 공사 내역 등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의 지역 교육계 감사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 정화를 정부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천명할 정도로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분야를 맡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은 백년대계의 기반을 새로이 다진다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사정활동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정 장기화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시설사업은 물론 물품 구입 등 교육행정이 사실상 얼스톱됐다. 수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만큼 예산집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수사방식 때문에 교권 추락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수개월간 계속된 수사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육비리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그만'식의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는 일선 교육현장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이다.

고질적인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리 수사와 함께 인사시스템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도입 등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불·탈법 단속에 '점수' 따지는 경찰이라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성매매 등 반대영업을 하는 유혹주점과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챙기는 이른바 '보도방'이 성업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업소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직부성과 평가 점수가 강력사건에 비해 크게 낮다는 이유로 단속을 기피하고 있다.

경찰의 외근형사 직무 평가를 살펴보면 살인과 강도·방화의 평가점수가 각각 50점과 30점, 강간·절도는 20점인 반면 보도방·유혹업소 업주 검거에 따른 점수는 1명당 1점에 불과하다. 여기에 업소들의 불·탈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단속 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상의 한계도 경찰의 단속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은 은밀한 연락망을 갖추고 활동하는 만큼 검거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한다. 검거하더라도 수십 명에 달하는 도우미와 보도방 업주, 유혹업소 주인 등을 불러 일일이

조사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경찰관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주는 '브로커' 역할까지 했으니 경찰 스스로 불법영업을 부추긴 셈이다. 경찰관들이 "시간만 낭비하는 유혹업소와 보도방을 단속하려고 달려드는 무모한 직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현실을 적시하는 대목이다.

그렇더라도 경찰이 단속을 기피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평가점수가 낮고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면 개선책을 찾아야 이를 방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다.

유혹주점과 보도방이 미성년자 고용으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이로 인해 성범죄 유발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 또한 높다.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윤길중. 병원 특성상 4월은 의료계 언어로 나를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다. 겨울철의 바쁜 시기를 보내고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 이 시기에 맞추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안과 쪽에서는 매년 4월이면 미국 백내장 굴절학회가 개최되는데 미국 이외에 전 세계의 유명안 학자들이 참석해 각 분야의 임상결과 등을 발표하게 된다. 개원가에 있는 일원으로 안과쪽의

기고 장명식. 영산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강의 하나로, 남도의 곡창인 나주·송정·학교평야를 가로 지르는 호남의 젓줄이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홍수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 많은 강이었다. '영산강유역농업종합개발'은 지난 196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972년에 1단계사업이 착공되어 영산강 상류지역에 장성, 담양, 광주, 나주를 1976년에 완공, 265만ha의 농업용수

태극기의 브랜드화.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환자들에게 접목하는데 도움이 되어 매년 참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수년 전까지만 하여도 방관자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증가하고 포스터나 필름부분에서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세계의 유수 안과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외국자라고, 매년 참가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대한민국의 국가 인지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학회장이나 숙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전자제품이다. 그 중에서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가끔은 국내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 텔레비전 속에 태극기 로고를 붙인 모자를 착용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학회 시기와 맞물려 미국의 유명한 골프대회인 마스터즈가 개최된다. 대회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

'영산강 하구둑' 리모델링 오해와 진실. 발과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방조제 운영에서 보듯 기존에 운영중인 저층수 배제시설로 인하여 인근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사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우려할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영산강유역의 가뭄과 홍수가 예방되고 수질과 생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수갑문, 제수문, 교량 등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하여 관광자원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산강과 목포 앞바다가 풍요로운 삶의 터전과 희망,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으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無等鼓.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기표(記票)용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12대 총선부터다. 정부 수립 초기에만 해도 대나무로 된 붓 대롱이나 탄피, 불펜 등 '0' 모양을 짤 수 있는 다양한 도구 가 이용됐다. 60년대 초 인제 보결선거에서는 '호박 꼭지'를 기표용구로 썼다는 기록도 있다. 얼마나 선거관리가 엉망이었던지, 1967년 6·8총선에 앞서 중앙선거위가 "기표용구는 구멍이 크고 확실한 붓대, 탄피 등을 쓰되 필터, 송 등으로 막아 무효표가 광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물론 1985년 표준화된 기표용구에 찍힌 모양도 '0'을 유지, 92년 14대 총선까지 지속됐다. 이것도 가끔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다른 쪽에 묻어 이중 표기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4대 대선부터는 '0'안에 '人(인)'을 넣었다. 그렇지만, "人"자가 이 때 김영삼 대통령의 '삼'자를 연상시킨다"는 말이 돌면서 94년부터는 '0'안에 '卜(복)'자가 들어가는 형태로 변경됐다. 종이 접히더라도 어느 쪽이 실제 찍은 건지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6·2선거에서 사용할 '만년기표봉'은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인주 없이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최첨단 기표용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처럼 기표용구를 개선해 온 것은 단 한 사람의 민의라도 소중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당의 선거관리는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가 보다. 최근 치러진 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원회 지방의원 경선과 정에서 기표용구와 인주가 없고, 찍취선에 직인이 찍히지 않는 투표용지가 등장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부랴부랴 불펜 대용으로 대신했다는 하지만 선거인 중보, 유령당원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등장한 불펜 대용, 매사를 네 탓으로 돌리며 핏대를 세우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흙친 자전거 인터넷 판매 버젓이... 단속 필요. 아이가 타던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며 울고 들어왔다. 하지만, 다른 물건과 달리 자전거 분실은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훔친후 팔아서 용돈으로 쓰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해서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카페에 가보면 무수히 많은 자전거 중고 판매 물건들이 올라와 있다. 이게 과연 본인들이 타던 자전거가 맞을까? 인터넷 사이트는 중고물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팔기 쉽고 현금화하기도 쉽다 보니

아동들의 친족 성폭력 피해 신고체계 강화. 얼마 전 서울 마포에서 여중생이 친아버지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하고 72일 동안 강제로 학교를 결석한 사건이 터졌다. 이게 어디 서울만의 일일까. 모르기는 해도 보호사 각지대에 놓인 지방은 더 심할 것이다. 친족 성폭력, 이것은 정말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터진다 해도 고걸 아는 학교 선생님도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 가운데 80%는 부모와 가족에게만 피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3분의 1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사실. 그만큼 피해 사실을 알아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회2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